

실천적 과제

2013. 11. 7

(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)

1. 한국에서 유일한 전국차원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임.

- IMF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한 사업조직들의 등장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결합, 관련 제도화(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사회적기업육성법, 협동조합 기본법) 등을 배경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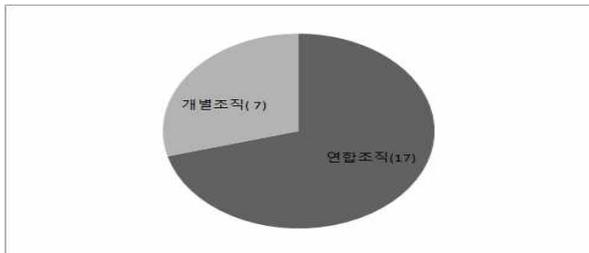
<IMF 이후 등장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>

	예비사회적기업	자활기업	마을기업
913개	1,537개(2013.9)	1,700개	787개(2012.12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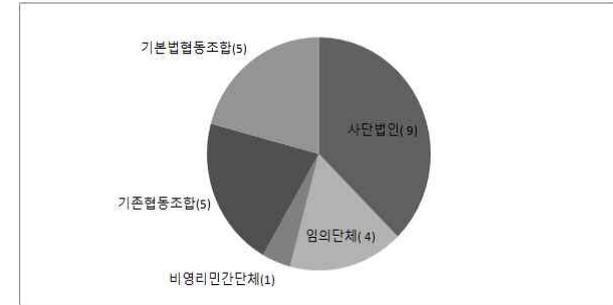
- 2006년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2010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2개의 전국 네트워크가 2011년 11월 21일 통합해 설립
-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진영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

2.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규모와 현황(40개 회원단체 중 응답 24개 단체 기준)

1) 조직 성격 분류



2) 단체 유형 분류



3) 회원 및 조합원과 고용규모

- 24개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과 회원의 수는 857,425명
- 17개 연합조직(지역네트워크 2개)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수는 686개
- 이들 단체에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 수는 5,006명

4) 재정 규모

- 24개 조직의 2012년 총매출액은 9,096억원, 순이익은 17억 4,870만원
- 2012년 사회공헌기금을 집행한 조직은 8개 조직의 5억 4,600만원
 - ※ 용도 : 사회복지 기금, 활동가 장학금,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금, 공동캠페인, 회원단체 공동사업자금, 회원단체 위기관리 지원금, 제3세계 유기농업지원, 원전직업병관리재단 기부 등

5) 사회적경제 진영 간 거래

(1) 거래 현황

-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물품을 이용하고 있는 조직 : 3곳
- 계획 중이거나 변경이 가능한 조직은 : 8곳

- 거래처를 유지하려는 곳은 8개

(2) 거래하고 싶은 품목

행사시 야외도시락, 인쇄물, 매점, 사내매점 판매물품, 재생토너 및 카트리지, 의료 및 기술 지원 서비스, 금융서비스, 친환경식품 및 잡화, 일회용품 등

3. 과제

1)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

- 광역과 기초단위의 지역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, 협동조합협의회,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.
-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 성장 해 온 자활기업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동조합을 분리해서 사고하고 연대하는 경향이 보임. 지역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동조합협의회, 협동사회경제연대체 등이 조직되고 있는데, 상호 관계성을 맺지 않고 병렬적으로 존재.
- 연대 활동의 이니셔티브나 멤버십의 공감대 및 유대감의 차이 등의 이유가 반영된 것임. 차별성이나 동질성이 강조될 경우 사회적경제 진영이 통합된 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기에 극복해야하는 경향임.
- 실천적으로는 협동조합진영과 사회적경제 진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각각을 그룹화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. 기존의 네트워크들과의 적극적 관계 맺기를 상호연계와 계통성을 체계화 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됨.
- 지역네트워크와 내부거래 및 자금 조성 등과 같은 구체적 이슈를 매개로 지원과 협력 활동 수행.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.

2) 사회적 자본을 물리적 자본으로 전환

- 연대와 네트워크 활동은 시민사회집단과 진영의 성장 원인이 되기도 하고,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실천되어 옴. 따라서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네트워크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에 있음.
 - IMF 이후 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맞물려 양적 성장을 해 온 사회적경제는 '정책과 행정의 과잉'이라 할 수 있으며,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주도성 확립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.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양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생 협동조합의 등장 현상에도 예외 아님.
 -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것은 중요함. 러나 실천적으로 부족했던 주체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에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라 인식함. 주체의 힘이 전체 될 때, 정부와의 수평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, 정부 정책이 지배하는 사회적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임.
 - 따라서 연대회의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전체 사회적경제 진영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, 또한 사회적 자본이 물적 기반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.
- 3)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과 정책 개선 활동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구축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와 우선구매 등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 시스템 구축 등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거래와 내부 자금 조성 등과 같은 상호 협력과 연대 등이 강조되고 있음.

- 현황 조사 및 욕구조사에 기초해 내부기금 조성 방안과 상호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실행하고자 함.

-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 개선에 주목.
협동조합기본법 개정,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.
사회적기업육성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상호유기성을 높일 수 있는 검토 준비.